



한국의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장 기 원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I. 대학경쟁력 강화 필요성

지식 사회, 정보 경제 (Information Economy), 경제·사회 활동의 지구적 통합 (Global Integration of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본과 노동력 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지식과 기술을 체화한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요구되며, 대학은 이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지역혁신 활동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 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5위이나,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IMD, 2003).

II. 우리 대학의 현황

1. 강점 및 기회요인

먼저 우리나라는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의 76%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 잠재역량이 풍부하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및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식정보화에 따른 성인 및 근로자의 계속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SCI 논문 수 : 세계 20위(1998) → 세계 16위(2000) → 세계 13위(2003)

2. 약점 및 위기요인

우리나라 대학의 약점으로는 먼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시설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백화점식 종합대학화로 대학의 특성화가 미흡하고, 수월성 추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운영체제가 비효율적이며,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2002년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가 26%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현장과 대학교육이 유리되어 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입

학 자원이 부족하며, 수도권 위주의 대학 서열화로 지방대학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동시에 외국대학에 대한 선호로 우수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Ⅲ. 대학경쟁력 강화 방향

앞으로의 대학경쟁력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 대학의 자율 역량 강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존 기능을 정책중심으로 혁신하고 기타 사무는 모두 자율화한다는 원칙하에 대폭적인 자율화를 추진하며, 자율화한 업무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 감사, 정보공개 등을 통해 수입 기관의 책무성 확보

-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제고

평가를 통하여 대학 유형별, 특성별 소수 우수대학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분야 육성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2004년부터 모든 대학에 대한 일반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경쟁력

없는 한계법인이나 부실법인의 경우 과감한 퇴출 유도

Ⅳ.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1. 더 많은 자율, 보다 큰 책임

대학의 자율화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연내에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를 설치, 2004년 상반기 중 자율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방식 자율화(2002), 대학(원) 학생정원 사전조정 폐지(2003) 등 대학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율화 대상을 검토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관리·집행 업무는 대부분 자율화하여 대학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할 것이다.

대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확대 실시하고,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

〈표 1〉 대학졸업자 수 변화 추이(4년제 대학)

(단위 : 명)

연도 \ 학생 수	1965년	1985년	1995년	2003년
졸업자 수	36,180	118,584	180,664	258,126

〈표 2〉 교수 1인당 학생 수(2003)

(단위 : 명)

연도 \ 학생 수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학생 수	31.2	11.4	13.5	12.1

허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학칙이나 정관, 학교헌장 등에 직업기술중심으로 유형화 방향을 명문화한 대학의 경우, 빠르면 2005학년도부터 학과제 모집이 확대되어 실무직업교육중심의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석·박사 통합과정만 법령에 규정됨으로써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이 곤란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고등교육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학생의 대학원 조기진출을 유도하고 대학이 다양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위제를 도입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대학 관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사현장지원팀'을 설치하여, 현재 각 대학의 우수 학사 관련 사례들을 보급하고, 학사 운영상 나타나는 각종 애로사항을 대학과 함께 해결함으로써 각 대학의 여건에 맞는 학사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율화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평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평가예고제 및 주기제를 도입하고, 평가자료 DB를 구축하여 대학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진학 대학 선택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평가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학선택정보 : 대학의 교육여건(교원확보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도서관 장서 수, 정보화 비율), 취업률, 연구실적, 장학금, 후생·복지 실태 등

우리 대학을 '공부하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능능력 부족자에 대한 보충 교육과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현재 연구중심업적 위주의 교수업적평가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유형별·특성별 교수업적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승진, 성과급, 연구비, 재임용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중심 대학의 경우 교수평가지 연구업적비중을 축소하고 강의평가결과 등 교육업적 비중을 강화하게 되어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여 개 대학에 설치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학에서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습법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통해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회가 요구하는 품성 및 자격을 일정 졸업요건으로 하는 졸업인증제의 확대에 대학졸업자의 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기업만족도 평가를 도입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부하는 대학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졸업인증제 실시대학 : 63개 대학(51개 대학 필수)

※ 성공관대의 3품제 : 인성품(사회봉사), 국제품(외국어), 정보품(정보화)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서는 수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완화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각 대학별로 학생의 소질, 적성과 능력을 존중하는 다양한 선발방법을 강구·정착시켜 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2. 과감한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간 연합 및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간 통합 인가시 정원을 적정규모로 축소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편제 완성년도까지의 정원 축소분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립대간 연합대학 추진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려는 권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연합대학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과 지원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타 권역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고등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연합대학의 근거와 함께 연합대학 내 예산집행, 조직운영,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단계별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학간 연합체제가 구축되면 연합대학간 역할분담을 통한 개별 대학의 특성화 및 집중 지원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대학간 자발적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한계법인·부실법인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3년 11월 현재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법인 중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등을 통하여 2004년 3월까지 강제 해산한다.

대학의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원확보를 등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를 설정, 기준 미달대학은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등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내년부터 정원감축 대학에 대하여는 특별 재정지원을 한다.

※ 수도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300억 원 지원(2004)

대학 경영의 민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회 등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회의록 자필 서명제 도입(11월 말까지 행정예고), 예·결산 공개제도의 확대 등 사학 경영의 투명성·민주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공정하고 개방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구(예 : 일본의 평의원회)를 두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임원취임, 경미한 정관변경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한 대학이 교육·연구 외에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지역사회협력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시설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3. 대학의 연구력, 세계수준으로

BK 21 사업(1999~2005)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Post-BK 21 사업을 신성장 동력산업과 국가전략분야(6T)의 과학기술분야 중심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육 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 7~8개, 지방대학 7~8개를 선정·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

2002년부터 내년까지 모두 3천억 원을 지원하는 '기초학문육성사업'은 학문의 균형발전과 학문 후속세대 육성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2005년 이후에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계획

(2005~2009)'을 수립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등 기초학문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지원 사업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단기·소규모 위주에서 중장기·대규모과제 지원 위주로 전환하고, 현재 15% 수준인 대학의 간접연구비를 2006년까지 30%까지 확대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의 대응투자 의무 비율을 최소화하여 연구수행방식을 합리화한다.

우수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 및 대학연구소의 연구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하며,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학부생 위주에서 대학원생으로 수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4. 지방대학,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지방대학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2004년부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체계(RIS)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대학,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소, NGO 등이 참여한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지역단위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에서 평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대형·중형·소형)을 구분하여 평가·지원하게 될 이 사업은 13개 비수도권 권역 내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지

원함으로써 지방대학의 분야별 특성화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분야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장기(5년)적으로 일괄지원하고 학생충원률, 교원확보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만 지원하도록 하여 정원감축·조정 등 자율적 구조조정도 함께 유도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지역산업발전 전략과 인력양성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산업계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대학 교육의 내실화로 청년층 취업능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4년~2008년까지 매년 3000억 원씩 총 5년간 1조 5000억 원 투자

5. 대학교육, 수요자에게 더 가까이

전문직업인력분야(의·치의학, 법학, 경영 등)의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미 전환이 확정된 16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시작으로 나머지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2004년 중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마련하며,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MBA 모델 개발 등 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제도적 여건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폭 넓은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에, 전문 직업교육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대학입학 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문 직업분야 진입을 위한 경쟁을 완화하고 학부 및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주문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체 근로자 등을 정원 외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시에 산업체 인사의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 및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더욱 탄력적인 인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장감있는 실무교육과 평생에 걸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업고와 전문대 사이에 시행되고 있는 연계교육과정을 전문대와 일반대학간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업체 근로자의 전직교육, 재취업교육 등 성인·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성인학습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 졸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에서 계속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업체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계와 대학의 효율적인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위하여 독립법인격을 가지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설치를 지원하여 산학협력단이 정부지원의 각종 산학협력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산학협력 민관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전경련·노동부 등과 함께 대학생 장기 인턴십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선하는 등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학교기업 설립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교육활동이 생산과 연계되어 그 결과를 직접 제품으로 생산, 가공,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대학부지에 지자체·출연연구기관·기업의 협력연구소를 유치, 시설·장비 및 연구인력을 공동 활용하여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대학 내 '산업기술교육단지' 조성으로 교육활동과 시제품개발 등 기술개발 및 이전, 사업화 등의 활동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다.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의 우수대학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외국 우수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교육과정, 경영방식 등에 있어 국내 대학들의 국제

●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 ▶ 설립주체 :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정부
- ▶ 입학자격 : 원칙적으로 외국인이나, 제한적으로 내국인 입학 허용
- ▶ 특이사항 : 설립기준 대폭 완화, 해외송금 제한적 허용 등
- ▶ 추진일정 : • 법안 관련 공청회 - 2003. 11. 25.
• 입법 예고 - 2003. 12.

● 대학경쟁력 지표의 변화(2003년 → 2010년) ●

- ▶ 졸업후 취업률 : 60% → 70%
- ▶ SCI 논문 게재 100위 이내 대학 : 1개 대학 → 5개 대학
- ▶ 기업과 대학의 지식이전(IMD) : 세계 16위 → 10위 이내
- ▶ 교수 1인당 학생 수 : 31명 → 20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좋은 자극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수요도 부분적으로 흡수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교육·연구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중 국내 대학의 해외 홍보 활성화, 비자발급의 간소화, 장학금 지원, 외국인 학생 기숙사 신축 지원 등을 포괄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대학의 연구정보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정보화 활성화 종합 방안 : e-Campus VISION 2007' 을 추진하여 대학의 정보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구중심(고급전문인력), 교육중심(중견전문인력), 직업기술교육중심(현장기술인력) 대학 등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V. 맺는 말

6. 대학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정부는 앞으로 대학이 설립목적, 교육여건 등에 따라 스스로 대학 유형을 결정하여 학교 단위 또는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면 정부는 대학별 유형에 따라 행·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을 축소하여 대학원 비중을 확대해 가도록 하고, 교육중심대학/직업기술교육중심대학은 특성화된 학부중심으로 학사조직을 개편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방안의 추진을 통하여 우리 대학을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또한, 현재 세계 28위인 고등교육경쟁력을 2010년까지 세계 15위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대학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